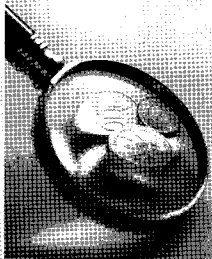




— 산업동향



- 日 지진, 우리 실물경제엔 별 영향 없을 듯
-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정체 획기적으로 개선
- 3월 취업자 46.9만명 ↑ ... 4월에도 고용개선세 지속될 것
- IMF “올 한국경제 4.5% 성장 유지... 물가는 4.5%로 상향”
- 대기업 계열 동종 중소기업 조달시장에서 퇴출
- 100인 이상 사업장 1분기 임금인상률 4.6%
- “납품단가 깎는 대기업 간부 해고해야”
- 中企직장인 “우리회사 소통 점수 50~70점”
- 성실납세 소상공인·사회공헌기업 우대
- 원·달러 환율 1,100원선 '붕괴'
- 중국진출 中企 경영애로 해결 돕는다
- “中企 가려면 연봉 2200만원돼야”

日 지진, 우리 실물경제엔 별 영향 없을 듯

피해 큰 도호쿠 지역과는 교역 규모 작아...철강
수급엔 영향

지난 11일 일본 동북 태평양 연안 해저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은 잇단 여진과 쓰나미로 이어지며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규모 9.0의 지진은 일본 최대이며, 세계에서 3번째 강한 것.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진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현지 우리 기업의 피해 현황 ◆

일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대부분은 생산시설보다 서비스법인 및 영업사무소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가 집중된 센다이 부근의 우리 기업은 롯데상사와 진로 재팬이 있으며, 롯데상사는 1억~2억 엔의 손실이 추정되나 보험가입으로 실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로 재팬도 재고가 일부 손실됐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 법인(오사카 소재 포스코와 한샘, 후쿠오카 소재 자원메디칼 등 3개) 가운데는 포스코에 약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한 정도다.

◆ 무역 부문 ◆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금액은 2009년 기준 1조 668억 엔으로 일본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또 도호쿠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출도 2009년 261억 엔으로 일본 전체의 1.3%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동북지역과 큰 규모의 교역을 하지 않아 이번 지진이 대일무역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주요 부품 및 소재 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물류의 마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국내의 생산과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산업 부문 ◆

1. 철강

지반침하 및 화재로 신일철, JEF, 스미토모 등의 고로 가동이 잠정 중단돼 일부 철강재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핫코일, 후판 등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수입의 42%를 차지하는 철스크랩 수급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 석유화학

동북지역 3개 단지, 8개 기업이 지진 및 화재로 가동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기간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일부 중간재를 수입하고는 있지만 공급선 다변화 측면이고, 국내 공급

능력 또한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3.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중 DRAM은 거의 피해가 없고 낸드의 경우 일부 공장은 진동으로 일시 생산한 상태다. 시스템반도체는 일본 내 주요 기업의 일부 공장이 지진지역 주위에 있어 진동으로 인한 일시 생산 중단 사태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일부 공장의 가동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제품의 수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 디스플레이

일본 남부의 LCD공장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도쿄 인근의 부품·소재 공장은 정전에 의해 일부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수입 물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5. 휴대폰

일본 부품업체의 피해가 미미하고 국내 업체의 충분한 재고 확보로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6. 기계

대일 의존도가 낮고 일본의 피해 업체가 적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7. 자동차

완성차는 일본 수출 규모가 극히 작아 영향이 미미하지만 부품의 경우엔 단기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نيسان 등 주요 공장의 가동중단으로 국내 부품의 조달 증가세가 주춤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공장의 조업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원유 및 석유 제품 ◆

3월 11일 국제유가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제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향후에도 일본의 정제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세계 제3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하루에 440만 배럴을 소비해 세계 소비량의 5%를 점유하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정체
획기적으로 개선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수원시, 광명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추진중인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하여 3.15.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4월중 착공한다”고 밝혔다.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길이 27.38km에 총 1.1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6년 4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고려개발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가 BTO (Build-Transfer-

Operation)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구간은 현재 운영중인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계획중인 광명-서울-문산 구간까지 개통되면 수원에서 문산까지 이동할 경우 약 1시간정도 단축됨은 물론 시흥·광명 보금자리지구, 화성 봉담지구 등 신규 입주가 예정된 택지지구 주민의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 수원 ⇄ 광 명 ⇄ 서울 ⇄ 문산 : 약 1시간 소요
- 수원 ⇄ 영동선 ⇄ 서울외곽선 ⇄ 국도1호선 ⇄ 문산 : 약 2시간 소요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1호선 등 기존 도로의 지정체가 완화되어 매년 1만 6천톤의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로 연간 46억원(수원-광명 기준) 규모의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본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14배)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MRG와 통행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도해양부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이후 어려운 금융여건 속에서도 작년말에 금융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사례를 중심으로 그간 부진했던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월 취업자 46.9만명 ↑ ... 4월에도 고용개선세 지속될 것

3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6만9000명 증가했다. 내수 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수출 호조에 따라 광공업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민간 고용회복 기반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통계청의 '2011년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민간부문 중심의 견조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농림어업 취업자(7만1000명)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9만8000명 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서비스업 취업자는 보건·복지, 사업지원, 전문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24만3000명)를 지속했다. 또한, 농림어업 취업자는 구제역 사태 진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7만1000명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계속 상승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했으며 청년 고용률도 전년동월 대비 0.1%p 오른 39.4%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고령층과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4.3%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8000명 증가했다.

한편 이러한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4월에도 고용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서비스생산, 소비 등 내수 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수출호조에 따라 광공업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민간 고용회복 기반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워크넷을 통한 구인 인원도 증가하는 등 기업의 구인 수요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정부일자리 사업이 3월부터 본격 시작된 것도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

2월에 상승한 실업률이 3월에도 4%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재정부는 지난해 추이를 감안할 때 4월 이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2010년에도 희망근로 모집 등의 영향으로 1월에 실업률이 상승한 이후 다음 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4월에도 고용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청년층,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02-2150-2812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0

IMF “올 한국경제 4.5% 성장 유지… 물가는 4.5%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유지했다. 다만 물가 전망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3.4%에서 4.5%로 높였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1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4.4%를 유지했으나, 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90달러에서 107달러로 조정했다.

IMF는 11일 밤 11시(한국시각 기준)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상반기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IMF의 전망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물가 상승률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한 부분이다.

미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직전 전망치(2010.10월)보다 1.2%p 높은 2.2%로 전망됐으며, 영국(2.5%→4.2%), 프랑스(1.6%→2.1%), 독일(1.4%→2.2%), 일본(△0.3%→0.2%), 중국(2.7%→5.0%) 등도 줄줄이 상향조정됐다.

다만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처방은 달랐다. 신흥국 경제에 대해 견고한 수요증가를 바탕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과열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 시장과열과 신용 붐에 대한 통화긴축, 거시건전성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선진국 경제에 대해선 더블딥 우려 감소, 금융시장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며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회

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재정·금융 부문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11 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올해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1월에 내놓은 전망치 1.6%보다 0.2%p 낮은 수치다. 다만 IMF는 내년 전망치에 대해선 0.3%p 상향한 2.1%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에 대해선 경기여건이 회복되고는 있으나 부동산시장 부진, 재정·통화정책 확대효과 미흡, 유가상승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1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2.8%로 하향조정했다.

대기업 계열 동종 중소기업 조달시장에서 퇴출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2012년부터 차단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중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09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되는 상한기준이 1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상한기준 추가 : 자기자본(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초과시 대기업으로 분류

* 관계회사제도 : 대·중소기업간 지분비율에 따라 기업규모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새로이 설립한 동종의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중기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강화 대책 요약

	2010 (실적치)	2011			2012		
		11.1월 (A)	11.4월 (B)	조정폭 (B-A)	11.1월 (C)	11.1월 (D)	11.1월 (D-C)
세계	5.0	4.4	4.4	-	4.5	4.5	-
선진국	3.0	2.5	2.2	Δ0.1	2.5	2.6	0.1
유로	1.7	1.5	1.6	0.1	1.7	1.8	0.1
신흥개도국	7.3	6.5	6.5	-	6.5	6.5	-
주요국가							
캐나다	3.1	2.3	2.8	0.5	2.7	2.6	Δ0.1
프랑스	1.5	1.6	1.6	-	1.8	1.8	-
독일	3.5	2.2	2.5	0.3	2.0	2.1	0.1
이탈리아	1.3	1.0	1.1	0.1	1.3	1.3	-
일본	3.9	1.6	1.4	Δ0.2	1.8	2.1	0.3
영국	1.3	2.0	1.7	Δ0.3	2.3	2.3	-
미국	2.8	3.0	2.8	Δ0.2	2.7	2.9	0.2
브라질	7.5	4.5	4.5	-	4.1	4.1	-
러시아	4.0	4.5	4.8	0.3	4.4	4.5	0.1
한국	6.1	4.5	4.5	-	4.2*	4.2	-
인도	10.4	8.4	8.2	Δ0.2	8.0	7.8	Δ0.2
중국	10.3	9.6	9.6	-	9.5	9.5	-
멕시코	5.5	4.2	4.6	0.4	4.8	4.0	Δ0.8
스페인	Δ0.1	0.6	1.8	0.2	1.5	1.6	0.1
EU	1.8	1.7	1.8	0.1	2.0	2.1	0.1

* 11, 2월 G20재무장관회의시 발표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아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과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의 : 공공구매관로과 황윤옥(042-481-8919)

100인 이상 사업장 1분기 임금인상률 4.6%

올해 들어 임금협상을 끝낸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8천458곳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임금교섭을 타결한 572곳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4.6%로 파악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인상률 4.5%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임금 인상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연도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7년 4.8%, 2008년 4.9%, 2009년 1.7%, 2010년 4.8%로 국내 경제가 전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을 제외한 최근 수년간의 수준과 비슷한 추세라는 것이다.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 타결 완료 사업장 비율)은 6.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포인트 낮았다.

노사가 희망하는 임금인상률 격차가 크고 변화된 임금교섭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부문별로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과 타결률은 4.7%와 6.9%였으며 공공부문은 2.7%와 4%였다.

고용부는 4월 이후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면 작년처럼 타결률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타결률 추이를 보면 4월말 10.9%에서 5월말 12.8%, 6월말 16.6%, 7월말 22.5%로 높아졌다.

“납품단가 깎는 대기업 간부 해고해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납품단가를 깎아 단기성과를 높이고 성과금을 챙기려는 기업 간부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기업 생태계 내 동반 성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납품단가가 깎이면 부품업체가 처음에는 경영, 기술혁신으로 대처하지만 한계에 이른다”며 “결국 부실한 부품을 납품할 우려가 있고 완제품 품질에 영향을 끼쳐 대기업도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물가 문제는 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 해외 공급적인 측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제어하려고 하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기업 채산성이 안 좋아지고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환율로 물가를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부품소재 산업이 타격을 입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부품소재 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백업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소직장인 “우리회사 소통 점수 50~70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 214명을 대상으로 사내 소통 평가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자사의 소통 점수로 ‘50~70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문에 참가한 인사담당자들은 자사 소통 점수로 ‘50~70점’을 준 응답자가 34.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90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6.6%로 많았다.

반면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50~70점’을 주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43.9%였고, 다음으로 ‘30~50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2.0%로 많아 대기업보다는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이 사내 임직원 간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을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7%의 기업만이 현재 사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고, 그러한 노력(복수응답)으로는 △부서 및 팀별 회식 진행을 한다는 응답률이 5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사 워크숍 및 체육대회 개최(40.2%) △사내 인트라를 통해 정보 공유(26.5%)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20.5%)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의 기타 의견으로는 △매일 아침 티타임 시간을 갖는다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멘토, 멘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등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근 새로운 메시지 전달의 채널로 각광받고 있는 △블로그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다는 곳은 6.8%에 불과했다.

사내 소통을 위한 노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들에게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 △사내 소통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부족

(36.1%)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35.1%) △수직적인 조직 문화 때문(34.0%) △COE의 지지가 부족해서(27.8%) △사내 소통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이 부담돼서(12.4%)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애사심 고취 및 이직률 감소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면 회사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사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밝아진다(33.6%) △애사심을 높일 수 있다(16.8%) △업무 처리가 빨라진다(15.4%)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10.7%) △부서별 또는 팀별 마찰이 줄어든다(10.3%) △이직률이 줄어든다(9.3%) 등이라고 답했다

성실납세 소상공인·사회공헌기업 우대

국세청은 지난 6일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열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3월 31일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실천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와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며 나눔 실천은 고귀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투명경영, 나눔실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를 예우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6월에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선정, 수상할 계획이다.

또 적은 수입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나눔 실천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시 소상공인 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헌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무조사 우대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계속 성실중소기업의 사업기간 요건(수도권 30년, 지방 20년) 완화 등을 통해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 선정 확대를 위해 납부 세액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5년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실납세자가 국세행정 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올해 모범납세자 포상(동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인 제일연마공업(주) 오유

인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과 여성 회계전문가인 이남령 항공대 교수도 위원으로 새로 선임했다.

원·달러 환율 1,100원선 '붕괴'

원·달러 환율이 추락을 거듭 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달 31일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7.50원 떨어진 1.09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08년 9월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전으로 회귀한 셈이다.

지난 3월11일 일본 대지진 직후 1,140원대까지 올라섰던 환율이 불과 20여일 만에 40원 넘게 하락한 것은 세계 경기 회복에 기댄 글로벌증시 강세와 달러 유동성 확대, 엔화 약세 기조 등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 저금리에 기댄 풍부한 달러 유동성과 국내 펀더멘털 개선 기대, 원화 저평가에 따른 역외의 원화 매수 움직임 등도 최근 환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엔화는 대지진 직후 70엔대 후반에 머물렀으나 최근 82엔대까지 올라섰다. 시장참가자들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화 매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시장 개입이 없는

이상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환율은 이제 마땅한 지지선도 없다”며 “리먼 사태 이전 최저 수준인 1,080원대 진입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외화예금)도 환율 하락에 맞춰 서울환시에 쏟아지면 환율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환율 향방을 전망하기에 앞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 여부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면서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3번의 1,100원선 테스트가 있었지만, 윤 좋게도 글로벌 증시 조정이 같이 오면서 추가 하락이 제한됐었다”고 말했다.

중국진출 中企 경영어로 해결 돕는다

서울, 부산, 대구서 교육 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어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국내외 교육 설명회 및 노무·세무분야 등 현장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폐지와 노무·세무분야 등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인력 구인난 심화, 인건비 상승,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 등으

로 최근 몇년간 중국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기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담은 '12.5규획' (제1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우리 진출기업의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중기청과 중진공은 우선 4월에 중국 진출기업의 한국내 모기업 밀집지역인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을 중심으로 한 교육설명회를 서울 4일, 부산 5일, 대구 6일 각각 개최한다. 한국 모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경제현황 및 향후 전망' 과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전략(정책, 세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국 투자진출 한국 모기업과 현지 진출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중기청·중진공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총 3회 순회 교육한다.

- 또 5월부터 10월까지의 중국 현지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정책동향, 내수진출 전략' 등 설명회와 한국 진출기업의 주요 경영애로 과제인 노무·세무 분야 등에 대한 1일 현장 진단도 병행할 예정이다.

□ 한국 모기업, 중국진출 관심기업과 중국 현지 진출기업 임직원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문의는 중진공 글로벌사업처로 하면 된다. (02-769-6846)

“중소 가려면 연봉 2200만원돼야”

4년제 대졸 신입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연봉의 마지노선을 평균 222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년제 대졸 신입구직자 517명을 대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 연봉의 마지노선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222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포별로는 '2200~2400만원' (26.3%)이 가장 높았고 '2400~ 2600만원' (22.1%)이 뒤를 이었다. '2000~2200만원' (18.2%), '1800~2000만원' (11.0%) 등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구직자도 많았다.

신입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입사의 가장 큰 이점은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 (32.9%)는 것이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이미 성장을 마치고 자리를 잡은 대기업에서는 불가능한, 내 손으로 회사를 직접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30.4%),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 (20.3%), '업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다' (5.4%), '승진이 빠르다' (4.8%), '업무량이 적어 자유시간이 많다' (2.3%) 등

을 중소기업 입사의 매력으로 들었다.

구직자들 중소기업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걸림돌로는 연봉이 낮은 것(3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복리후생이 좋지 못한 것(19.5%), 기업의 비전이 불투명한 것(18.2%),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12.2%), 주변의 편견이나 선입견(가족, 친지, 지인 등)(11.0%) 등도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막았다.

구직자들에게 선뜻 지원했던 중소기업은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복리후생이나 업무환경이 좋았다’(42.4%, 복수응답)는 점을 들었다. ‘연봉이 높았다’(30.8%)는 2위를 차지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연봉보다는 복리후생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의 규모가 큰 편이었다’(29.4%) 등도 중소기업 지원 이유로 응답했다.

